

해외파병 정책 결정 요인의 중요도 분석*

이 연구는 해외파병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추출하고,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파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외교부 등 정부 관련 부처 소속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을 전문가 I 그룹으로, 국제평화활동센터, 경찰청 등 UN PKO 관련 업무와 국제정책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군인, 경찰, 학계 전문교수를 전문가 II 그룹으로 각각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정성적 가치 판단을 정량화할 수 있는 AHP(분석적 계층화 과정) 기법과 현재 및 미래의 중요도 수준을 비교해 미래에 더 중시되는 요인을 전략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외파병 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영역별 AHP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국제협상 영역, 행위자 역할, 국내협상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합가중치의 결과값을 분석한 결과, 조사에 응한 전문가 그룹은 정책결정자(대통령), 재외국민 보호, 동맹 강화, 국제사회 기여, 외교역량 강화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AHP 분석에서 중·하위순위 그룹으로 인식한 요인과 요구분석에서 인식한 경제적 실익, 전략적 거점 확보, 여론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욱 중시해야 할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해외파병, 국제평화유지활동, 결정 요인, AHP, 요구분석

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9월, UN에 가입한 이래 1993년 7월부터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병한 이후 서부 사하라에 국군 의료지원단, 앙골라에 공병부대 및 동티모르에 상륙수부대, 아이티에 단비부대 등을 파병하였다. 지금도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여 30여 년이 지난 2023년 12월 현재 총 13개국에서 995명이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와 국가이익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행하고 있는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평화유지활동은 그 성격에 따라 UN PKO,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 활동으로 분류한다. UN PKO는 UN이 주도하는 활동으로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으로 파병되어 현지 정전감시와 국가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UN PKO는 지난 1993년 7월부터 1994년 3월까지 소말리아에 육군 건설공병단 1개 대대 규모의 상륙수부대를 파병한 것이 그 시작이고, 2023년 12월 기준 레바논 동명부대 276명, 남수단 한빛부대 281명과 5개국 7개 지역에서 개인단위 파병 24명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둘째,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의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고 분쟁 해결, 평화 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UN PKO와 함께 세계 각지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걸프전 당시 국군 의료지원단과 공군수송단(비마부대)을 최초로 파병한 이래 아프가니스탄에 해성·청마·동의·다산·오쉬노, 이라크에 서희·제마·자이툰·다이만부대를 파병하였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 활동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파병된 오쉬노부대는 총 1,800여 회에 달하는 호송 및 정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재건팀의 재건 활동을 보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기준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 249명과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등 개인단위 파병 15명을 포함해 총 264명을 7개 지역에 파병하고 있다.

국방교류협력 활동은 당해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교육훈련이나 재난 구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군사협력 활동과 인도적 지원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국방교류협력 활동 중 2011년

1월부터 UAE 특수부대에 대한 군사훈련을 지원하면서 연합훈련을 하는 아크부대의 경우는 군사협력 활동이며, 2023년 12월 기준 149명의 아크부대원이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11월 태풍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은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아라우부대와 2014년 3월 말레이시아의 실종된 여객기 탐색 지원 임무를 수행한 해상탐색단대,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 민간인 의료인력과 군의관 6명, 간호장교 9명으로 편성하여 파견한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KDRT : Korea Disaster Relief Team)'의 개인단위 파병은 인도적 지원 차원의 국방교류협력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탈냉전 이후 30여 년 동안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파병정책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자발적인 파병이 아닌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해외파병을 결정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내·국제적으로 상충하는 요구 및 여론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 능력이 요구되었다. 또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라는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을 지속 유지 및 강화해야 하는 점도 해외파병 정책 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해외파병 정책은 안보의 핵심인 군사력을 직접 투사한다는 점, 경제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의 가변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 그리고 군사력과 경제력 이외에 국가의 모든 기능을 협업하여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¹⁾.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파병 정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파병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파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파병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추출하고, 그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여 파병정책의 수립이나 결정의 판단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방산 장비 수출 및 작전성 향상 등 국익 창출을 위한 군사적 측면과 정당한 법적 절차에 기반한 파병 관련 제도의 발전적 측면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임윤갑, 『국제분쟁과 평화유지』(서울: 북코리아, 2021).

제 2 장 해외파병 결정 요인

제1절 우리나라의 해외파병 현황

우리나라의 첫 해외파병은 베트남전쟁 이후 1991년 1월, 걸프전쟁에 ‘의료지원단’과 ‘공군수송단(비마부대)’을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파병한 것이다. 그리고 그해 9월 17일, 우리나라는 161번째 UN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1993년 7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상륙수부대’를 파병하였다. 이후 2022년 12월까지 세계 30개국에 총 6만여 명의 장병을 파병하여 글로벌 안보 증진과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표 1〉 역대 정부별 파병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노태우 정부 (’88 ~ ’9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사우디 국군 의료지원단 • 1991년 UAE 공군수송단
김영삼 정부 (’93 ~ ’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소말리아 상륙수부대 • 1994년 서부 사하라 의료지원단 • 1995년 앙골라 공병부대
김대중 정부 (’98 ~ ’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 2001년 아프간 해상 / 청마부대 • 2002년 아프간 동의부대
노무현 정부 (’03 ~ ’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아프간 동의부대, 이라크 서희 / 제마부대 •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이라크 다이만부대 • 2007년 레바논 동명부대 • UN PKO 임무단 참여 : 라이베리아(’03), 부룬디(’04), 수단(’05), 네팔(’07), 수단 다푸르(’07)
이명박 정부 (’08 ~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 2010년 아이티 단비부대, 아프간 오쉬노부대 • 2011년 UAE 아크부대 • UN PKO 임무단 참여 : 코트디부아르(’09), 아이티(’09), 남수단(’11)
박근혜 정부 (’13 ~ ’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남수단 한빛부대, 필리핀 아라우부대 • 2014년 시에라리온 에볼라 긴급구호대
문재인 정부 (’17 ~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PKO 임무단 참여 : 예멘(’19)

* 출처: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3), p.310.

1. 국제평화유지활동(UN PKO)

UN PKO는 1948년 정전협정 감시를 위하여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12개 임무단이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에서 재건지원, 정전감시, 민간인 보호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20여 개 국가에서 약 7만 명을 파견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 가입 이후, 1993년 소말리아 상륙수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까지 25개 임무 지역에 2만여 명이 UN PKO에 참여하고 있다. 부대단위로는 7개 임무 지역에 1만 9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임무 유형별로 공병부대 4개(소말리아 상륙수부대, 앙골라 공병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전투부대 2개(동티모르 상륙수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의료부대 1개가 파병되었다. 이 가운데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는 현재까지도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현재, 부대단위 파병인 레바논의 동명부대 276명과 남수단의 한빛부대 281명을 비롯하여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등 7개 지역에서 24명이 개인단위 파병 임무를 수행 중이다.

2.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20세기 말 냉전이 종식된 이후 각종 테러, 해적 활동 등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안보기구 주도의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대응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1월부터 걸프전쟁 기간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국군 의료지원단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초로 파병하였으며, 이후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2009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각각 우리 군을 파병하였다. 2023년 12월 현재까지 26개 임무 지역에서 3만 9천여 명이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도 7개 지역에서 264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현재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을 위하여 소말리아 지역의 청해부대원 249명을 포함하여 미국 중부사령부 등에서 15명이 개인단위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는 우리나라의 청해부대 함정 1척과 일본 함정 2척 및 초계기 2대, 중국의 구축함 2척과 군수지원함 1척이 해양안보작전 및 대해적작전에 투입 중이다.

3. 국방교류협력 활동

우리나라의 국방교류협력 활동은 비분쟁지역에 군사협력과 국제공조 등을 위해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으로, UN 평화유지활동이나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과는 다른 한국

군의 확장된 해외파병 활동 형태이다. 이러한 국방교류협력 활동은 아크부대와 같이 다른 국가의 군사훈련을 지원하고 연합훈련을 시행하는 ‘군사협력활동’과 다른 국가에 대한 태풍 피해복구 지원, 에볼라 질병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구호대 파견, 실종 항공기 탐색을 위한 해상탐색 지원 등과 같은 ‘인도적 지원 활동’의 두 유형으로 분류한다.

2011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5개 지역에 3천여 명을 국방교류협력 활동 목적으로 파병하였다. 현재도 UAE와 아크부대의 국방교류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제2절 해외파병 국회 동의안 분석

우리나라의 해외파병 정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므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파병정책과 관련하여 상정된 안건을 논한 국회 회의록에서 주로 언급된 핵심 단어를 분석하면, 파병정책을 결정하는 당위성, 중요성과 연관된 요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파병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2010년 이후 과거 국회 국방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1.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10. 2. 19.)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은 대한민국 재건팀(이하 “PRT”라고 한다) 주둔지를 방호하고 그 활동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PRT²⁾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찰을 하는 것을 임무로 파견 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파병부대의 교대 주기는 연간 1회이며, 국제안보지원군과 동부지역사령부와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부대의 파병 및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며, 2010년도의 소요 예산은 최초 파견 동의안 제출 시 약 440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사업계획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증액되어 총 449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정부는 파병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테러 행위 근절 및 아프간 재건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태도를 밝힐 필요성과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 그리고 UN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의 상당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아프간에 국군부대를 파병하고자 하였다.

한편, 부대 파견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번 파병부대가 UN PKO가 아니라 다국적군 소

2) 지방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전후 복구를 위해 구성된 다국적·다기능 민사활동팀이며, 지방재건과 치안유지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안정화작전을 지원하는 조직

속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흐름도 이미 파병했던 자국의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어 '명분이 없는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 여론에 크게 어긋나며, 재파병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안전성 측면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의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할 의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도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파병의 필요성과 함께 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2.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2011. 11.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2009년 3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여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파견 기간을 2012년 1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소말리아 인근 해역은 해적에 의한 테러 활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덴만을 항해하는 우리나라 선박들의 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어 청해부대의 활동이 지속 요구되었다.

청해부대는 아덴만 여명작전, 한진 텐진호 구출 작전 등 해적 퇴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고, 2010년 한 해 동안 124척의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등 성공적으로 우리 국민과 국익을 보호하고 국위 선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에 따라 연합해군사를 포함하여 우리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협회 등 국내·외의 각 기관이 청해부대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청해부대 파견연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파견연장 동의를 요청하였다.

수석전문위원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 요지에 따르면, 연장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부대 규모는 320명 이내이다. 그리고 부대의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며, 필요하면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부대의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한다.

우리 선박에 대한 호송 작전은 우리 군이 통제하고, 해양안보작전 참여 시, 현지 사령관이 전술 통제를 한다. 이러한 청해부대 파견연장의 필요성은 “여전히 해적 행위 요인이 남아 있고, 아덴만은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전략적 항로로서 연간 약 500여 척의 대한민국 선박이 이 항로를 따라 운항하며, 우리 선원의 생명과 해운업계의 재산이 해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청해부대 파견을 통하여 해적 퇴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안보 유지 능력과 국제적인 공조 능력 향상에도 기여가 가능하며,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대상 부대의 파견연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므로 파견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파견부대 임무 및 작전 범위의 확대에 관한 문제로 부대의 규모는 이전보다 10명을 증원하고, 유사시 해외에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추가로 부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아덴만 해역 일대뿐 아니라 지시된 해역에서도 작전할 수 있도록 작전지역을 확대하였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아덴만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보호 활동에도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다만 청해부대의 임무 및 활동 지역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지고 국회가 임무를 제한하는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무 수행과 작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요건을 정비하며, 임무 수행 즉시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 보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해부대 파견연장을 통해 소말리아 해역 일대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 해상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유사시 위기에 처한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익 증진은 물론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파견안은 가결되었다.

3.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2012. 11. 2.)

이 회의에 상정한 해외파견 관련 안건은 총 3건으로「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과「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그리고「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요지로 파견연장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고, 부대 임무는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파견 규모는 150명 이내이며, 3개의 동의안은 모두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와 이미 협의가 끝난 사항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국군부대는 민간 주도의 지방재건 활동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PRT 주둔지 경계 및 PRT 활동 보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PRT 단계별 철수계획에 따라서 병력 350명 중 대부분을 철수하고 기존 바그람기지 내 PRT 시설과 대사관 방호를 위한 경비대 병력으로 총 61명만 유지할 계획이었다. 오쉬노부대의 파견연장은 민간의 PRT 활동이 향후 계속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국군 병력의 잔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아덴만에 파병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3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병 기간 연장은 아덴만 인근 지역이 국가 간 해양물류 통행의 주요 항로로서 동 지역의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선원의 생명과 경제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제적인 공조 활동을 통한 우리나라의 안보 능력 향상과 국위 선양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파견부대의 임무 교대 등으로 인해 DDH-II급 구축함 전력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였다.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으로 이 동의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UAE의 알 아인 지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3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었다. UAE에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우리 군의 특수작전 수행 능력의 향상과 방산 수출 확대 등을 통한 교역의 활성화로 우리 국익의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견연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다.

4. 국회 회의록의 핵심단어 분석을 통해 추출한 정책 결정 요인

위에서 살펴본 3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상위 40개 단어를 추출하면 <표 2>와 같다. 국방위원회 회의록에서 총 16,293,270번의 단어가 출현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위원”으로 735,040번 출현하여 4.5%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해외파병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대체로 국제사회 공헌 및 우리나라 외교역량의 강화에 대한 기여도, 동맹국과의 결속체계 강화에 미치는 영향, 파병지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가능성,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과 경제적 실익, 파병지역의 작전 여건 평가, 정책결정자와 국회의 역할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9가지의 주요 논의사항들은 회의록에서 언급된 빈도가 높은 상위단어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국제사회 공헌 및 우리나라 외교역량 강화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국제, 아프간, 지원, 보호 등의 상위 빈도 단어와 연결된다. 동맹국과의 결속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군, 국민, 나라, 미국 등의 단어와 연결된다. 파병지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프간, 지역, 국민, 보호 등의 상위 빈도 단어와 연결된다. 우리나라 안보 상황과 경제적 실익과 관련해서는 안전, 예산, 준비 등의 단어와 연결된다. 파병지역의 작전 여건과 관련해서는 파병, 지역, 철수, 작전, 현지 등의 단어와 연결된다. 정책결정자와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위원, 장관, 국방부 등의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표 2〉 국방위원회 회의록 주요 상위 30개 단어

순위	단어	출현빈도	비율(freq)	순위	단어	빈도	비율(freq)
1	위원	735040	0.045544	20	위원	735040	0.045544
2	장관	557023	0.034514	21	장관	557023	0.034514
3	국방부	532587	0.032999	22	국방부	532587	0.032999
4	부대	298216	0.018478	23	부대	298216	0.018478
5	파견	257725	0.015969	24	파견	257725	0.015969
6	파병	232053	0.014378	25	파병	232053	0.014378
7	아프간	160414	0.009939	26	아프간	160414	0.009939
8	지역	139910	0.008669	27	지역	139910	0.008669
9	철수	125847	0.007798	28	철수	125847	0.007798
10	지원	120533	0.007468	29	지원	120533	0.007468
11	국민	111774	0.006926	30	국민	111774	0.006926
12	연장	110301	0.006834	31	연장	110301	0.006834
13	정부	105768	0.006553	32	정부	105768	0.006553
14	군	104269	0.006461	33	군	104269	0.006461
15	나라	104212	0.006457	34	나라	104212	0.006457
16	보호	102068	0.006324	35	보호	102068	0.006324
17	국제	95313	0.005906	36	국제	95313	0.005906
18	기간	91510	0.005670	37	기간	91510	0.005670
19	임무	83720	0.005187	38	임무	83720	0.005187
20	국군	81701	0.005062	39	국군	81701	0.005062

※ 단어 총 출현 횟수: 16,293,270회

제3절 파병정책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파병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해외파병의 성과와 한계점을 확인한다면, 그것은 역으로 파병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지효근(2021)은 우리나라 해외파병의 성과와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³⁾. 먼저 성과는 군사적 측면과 외교·국방 목표 달성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외교·국방 측면에서 첫째, 동맹국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파병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발전기와 성숙기를 통해 국익을 창출하기 위한 해외파병 활동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파병정책의 실현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활동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소말리아 아덴만으로의 청해부대 파병이 대표적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해외파병을 통해 다양한 실전경험을 축적하여 외국군과의 연합작전 경험, 합동성 강화, 그리고 실전적

3) 지효근, “포괄안보 시대 한국의 해외파병 발전방안 연구”『국방정책연구』, 제132호, (2021), pp.9-36.

군사력 운용 능력이 향상되었다.

정도생(2006)은 우리나라의 평화유지활동 파병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국제환경은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 증가와 함께 UN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 한편,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한 다양한 여론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참여자들이 여론의 방향성에 의해 해외파병 정책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파병정책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우리나라가 해외파병이라는 외교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특히, 여론은 대통령과 정부 관료, 그리고 국회와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파병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많은 사람에게 방향성을 제시한 기초가 됨으로써 사실상 해외파병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지원(2016)은 변화된 국제안보 상황과 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군이 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해외파병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해외파병을 통한 우리의 국익과 국제사회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⁵⁾. 특히, 탈냉전 이후 우리 군이 시행하였던 파병정책은 군사적, 국익 추구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이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외파병은 작전 수행 측면에서 우리 군의 작전지속능력 향상과 전투기술 배양, 안정화 및 민사작전 수행 능력의 향상을 직접 경험하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으며,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실리적 국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현지 교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로 군사협력을 활성화하고, 건설적인 공공외교에 이바지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였다.

최근 안보경영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이 동반된 국방협력은 경제협력이 동반되지 않은 국방협력에 비하여 대략 50% 이상의 수출을 촉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로 아크부대와 함께 경제협력이 동반된 국방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UAE에 연간 약 14.7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외파병의 국가적인 혜택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국익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는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4) 정도생, “한국의 해외파병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학위 논문, (2006).

5) 윤지원, “탈냉전기 한국군의 파병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世界地域研究論叢』, 제34집 1호, (2016), pp.110-114.

제 3 장 분석 방법

제1절 분석의 틀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파병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출한 후 AHP 기법을 적용하여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 요구분석을 통해 미래에 실효성 있는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파병정책 결정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병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외교정책 이론모형으로부터 파병정책 결정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9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실제 파병정책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국회 국방위원회의 파병동의안 회의록 확인 등의 문헌연구와 과거 우리나라의 파병사례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파병정책 결정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1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아울러 UN PKO,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 교류협력 활동 등의 파병 및 해외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포커스 그룹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추출한 요인과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해외파병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13개의 파병정책 결정 요인을 선정하였다.

추출된 파병정책의 결정 요인들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파병의 목표와 필요성에 따라 일반적인 요인과 일부 중복되기도 하였으며, 합참의 파병 타당성 평가서를 통해 현지 파병 활동의 여건을 판단하는 요인들과 중첩되는 내용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한 총 13개 파병정책 결정 요인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시 3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측정모형을 평가목표와 평가영역, 그리고 평가 요소를 3단계로 구성하고, 각각의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와 평가영역 내에서 각각의 평가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향후 예상되는 평가 요소별 중요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AHP 분석과 요구분석용 ‘전문가 의견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추출된 파병정책의 결정 요인들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파병의 목표와 필요성에 따라 일반적인 요인과 일부 중복되기도 하였으며, 합참의 파병 타당성 평가서를 통해 현지 파병 활동의 여건을 판단하는 요인들과 중첩되는 내용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한 총 13개 파병정책 결정 요인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시 3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측정모형을 평가목표와 평가영역, 그리고 평가 요소를 3단계로 구성하고, 각각의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와 평가영역 내에서 각각의 평가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향후 예상되는 평가 요소별 중요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AHP 분석과 요구분석용 ‘전문가 의견조사서’를 작성하였다.

AHP 기법을 활용하여 파병정책 결정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학계 및 정부(외교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의 파병업무 전문가 그룹에서 공유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파병정책 결정 요인과 관련한 의사결정 시 시사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파병정책 중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안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제2절 AHP 분석의 평가영역 및 요소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평화의 수호를 위해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해 왔다. 향후 이러한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환경요인이 우리의 파병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파병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요인 간의 중요도를 고찰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실패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해외파병 사례분석과 전문가 논의를 통하여 파병정책 결정 시 중요한 결정 요인을 추출하고, 학계 및 해외파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 요인의 중요도를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평가대상인 '우리나라 파병정책 결정 요인의 평가영역 및 요소'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우리나라 파병정책 결정 요인의 평가영역 및 평가 요소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 요소(13)	주요 예시
파병 정책 결정 요인의 중요도 선정	국제 협상 영역	국제사회 기여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 기여 및 국제적 위상과 도덕성 제고
		외교역량 강화	유사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보 등 외교역량 강화
		동맹 강화	동맹국과의 외교관계
		재외국민 보호	파병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피지원국에 대한 인도적 구호
	국내 협상 영역	작전능력 배양	타국 군과의 연합작전능력 배양 및 합동성 강화, 실전 경험 축적으로 군 정예화에 기여
		한반도 안보 상황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 상황 고려
		경제적 실익	방산 수출 협력, 국제사회의 외교·국방 허브 구축
		전략적 거점 확보	신규 자원 공급처, 잠재적 방산시장 개척 등 국익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거점 확보
	행위자 역할	작전지역 평가	안정성 평가 및 작전지속지원 여건, 현지인 접촉과 의사소통 대책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
		정책결정자(대통령)	대통령의 정책추진 의지와 주도적 역할
		정부 관료	국정 기조와 주도 부서의 정책추진 방향성
		국회	여야 합의 등 명분에 대한 찬반
		여론	찬반 의사와 정책 결정 과정 개입의 적극성

제3절 전문가 의견조사

파병정책 결정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외파병 정책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방부 및 외교부 등의 공무원을 I 그룹으로, 국제평화활동센터의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과거 평화유지활동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참여했던 유관기관 소속의 군인, 경찰 등 유경험자들을 II 그룹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파병정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의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들과 파병정책에 대한 학술적 지식이 뛰어난 전문교수 및 PKO 관련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군인과 경찰로 편성하고, 2개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의견조사와 분석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정부 부처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로 구성된 I 그룹은 국방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파병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하였으며, 모두 19명 중 1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강의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교수진과 2021년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에서 PKO 관련 분야별 업무를 담당했던 군인과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된 II 그룹에서는 13부의 설문지 중 8부를 회수하여 I, II 그룹 대상의 전문가 의견조사서는 총 32부 중 25부를 회수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기간 중 응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건·사고 및 언론보도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실험설계의 내·외적 타당성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제 4 장 분석 결과

제1절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의 우선순위 분석

해외파병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파병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결과에 미치는 방식에 있어 그 상대적인 중요도가 서로 상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부 관계 부처의 파병업무 담당 공무원 및 국제평화활동센터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평가영역별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AHP(분석적

계층화 과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관성 비율이 0.1 이하인 항목은 분석 결과에서 제외하였고, 분석항목의 일관성 비율은 모두 0.0240 이하였다. 해외파병 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영역별 분석에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국제협상 영역(0.4253), 행위자 역할(0.4017), 국내협상 영역(0.1729) 순으로 나타나 PKO 등 파병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전문가 그룹에서는 파병정책 결정에 있어 '국제협상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상 영역과 행위자 역할은 중요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국제협상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는 국내협상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보다 약 2.4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파병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내적인 환경 요인보다 국제적인 환경 요인과 관련된 영역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와 각 평가영역의 평가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 그룹은 행위자 역할에서 정책결정자인 대통령(0.1856)을 우리나라 해외파병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국제협상 영역의 재외국민 보호(0.1266), 동맹 강화(0.1028), 국제사회 기여(0.1007), 외교역량 강화(0.0943)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반하여 국내협상 영역의 5가지 평가 요소는 모두 상대적인 중요도가 현저히 낮은 요인으로 인식되어 작전능력 배양(0.0404), 경제적 실익(0.0362), 한반도 안보 상황(0.0338), 전략적 거점 확보(0.0325), 작전지역 평가(0.0285)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4〉 평가영역 및 요소의 복합가중치와 우선순위

평가영역	평가 요소	복합가중치	우선순위
국제협상 영역 (0.4253)	국제사회 기여	0.1007	4
	외교역량 강화	0.0943	5
	동맹 강화	0.1028	3
	재외국민 보호	0.1266	2
국내협상 영역 (0.1729)	작전능력 배양	0.0404	9
	한반도 안보 상황	0.0338	11
	경제적 실익	0.0362	10
	전략적 거점 확보	0.0325	12
	작전지역 평가	0.0285	13
행위자 역할 (0.4017)	정책결정자(대통령)	0.1856	1
	정부 관료	0.0721	7
	국회	0.0842	6
	여론	0.0577	8

제2절 전문가 그룹별 평가요소에 대한 인식분석

관련 부처 공무원 그룹의 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와 평가영역별 평가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가중치의 결과값을 분석한 결과, 국제협상 영역의 동맹 강화(0.1807)가 해외파병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다음은 재외국민 보호(0.1722), 행위자 역할의 정책결정자(0.1686)가 3순위, 국회(0.1009)가 4순위 국제협상 영역의 국제사회 기여(0.0940)가 5순위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국내협상 영역의 작전지역 평가(0.0128), 전략적 거점 확보(0.0198), 작전능력 배양(0.0240), 경제적 실익(0.0242), 한반도 안보 상황(0.0248)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약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관련 부처 공무원 그룹에서 국내협상 영역의 5개 평가 요소가 모두 하위순위(13~9순위)로 나타난 것은 괄목할만한 분석 결과라고 판단된다.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의 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와 평가영역별 평가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가중치의 결과값을 분석한 결과, 행위자 역할의 정책결정자(0.2382)가 해외파병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다음은 정부 관료(0.1406), 국내협상 영역의 작전능력 배양(0.0907), 작전지역 평가(0.0822), 행위자 역할의 여론(0.0742)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은 상위순위(1~5순위) 중 4개의 평가 요소가 행위자 역할에 포함되었다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표 5〉 전문가 그룹별 평가 요소의 복합가중치와 우선순위

평가영역	평가 요소	복합가중치		우선순위	
		정부 공무원	유관기관 전문가	정부 공무원	유관기관 전문가
국제협상 영역	국제사회 기여	0.0940	0.0300	5	10
	외교역량 강화	0.0805	0.0292	6	12
	동맹 강화	0.1807	0.0184	1	13
	재외국민 보호	0.1722	0.0300	2	10
국내협상 영역	작전능력 배양	0.0240	0.0907	11	3
	한반도 안보 상황	0.0248	0.0561	9	9
	경제적 실익	0.0242	0.0699	10	7
	전략적 거점 확보	0.0198	0.0717	12	6
	작전지역 평가	0.0128	0.0822	13	4
행위자 역할	정책결정자(대통령)	0.1686	0.2382	3	1
	정부 관료	0.0390	0.1406	8	2
	국회	0.1009	0.0643	4	8
	여론	0.0524	0.0742	7	5

반면에 국제협상 영역의 동맹 강화(0.0184), 외교역량 강화(0.0292), 국제사회 기여(0.0300) 및 재외국민 보호(0.0300), 국내협상 영역의 한반도 안보 상황(0.0561)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약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제3절 요구분석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전문가 의견조사서를 통하여 얻은 요구분석에서 3개 평가영역의 총 13개 평가 요소에 대하여 t-검정과 Borich 공식을 활용한 요구도 값을 구한 후, 그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t-검정을 통해 미래 중요도 수준의 평균과 현재 중요도 수준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항목은 국제사회 기여, 외교역량 강화, 동맹 강화, 재외국민 보호, 작전능력 배양, 한반도 안보 상황, 작전지역 평가, 정책결정자(대통령), 정부 관료, 국회, 여론으로 나타났다.

〈표 6〉 현재와 미래의 중요도 수준에 대한 t-검정과 Borich 요구도 분석

평가 요소	현재 평균 (표준편차)	미래 평균 (표준편차)	차이		요구도 값	순위
			평균(sd)	t값		
국제사회 기여	6.84 (1.491)	7.60 (1.527)	0.76 (1.13)	-1.780	5.776	4
외교역량 강화	5.48 (1.960)	6.24 (1.738)	0.76 (1.23)	-1.450	4.742	5
동맹 강화	6.52 (1.262)	6.96 (1.540)	0.44 (0.92)	-1.104	3.062	7
재외국민 보호	5.64 (2.289)	6.36 (2.215)	0.72 (0.89)	-1.130	4.579	6
작전능력 배양	5.40 (1.936)	5.84 (1.993)	0.44 (1.12)	-0.791	2.569	8
한반도 안보 상황	5.72 (2.010)	6 (1.581)	0.28 (1.34)	-0.547	1.68	9
경제적 실익	5.48 (1.557)	6.60 (2.179)	1.12 (1.52)	-2.090*	7.392	1
전략적 거점 확보	4.96 (1.593)	6.08 (1.891)	1.12 (1.62)	-2.264*	6.809	2
작전지역 평가	4.76 (1.942)	4.80 (2.140)	0.04 (1.62)	-0.069	0.192	13
정책결정자(대통령)	7.32 (0.988)	7.48 (1.122)	0.16 (1.10)	-0.534	1.196	10
정부 관료	5.36 (1.704)	5.44 (2.103)	0.08 (1.29)	-0.147	0.435	12
국회	6.16 (1.675)	6.24 (1.809)	0.08 (1.12)	-0.162	0.499	11
여론	5.88 (1.763)	6.80 (1.607)	0.92 (1.80)	-1.927	6.256	3

***p<.001, **p<.01, p<.05

이와 같은 항목들의 t값은 모두 2보다 작은 값($p > 0.05$)으로 현재의 중요도 평균과 미래의 중요도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t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요인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차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구도 분석의 우선순위에서는 하위순위로 나타났다.

Borich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요구도 값이 가장 큰 평가 요소는 경제적 실익(7.392)이었으며, 다음은 전략적 거점 확보(6.809), 여론(6.256), 국제사회 기여(5.776), 외교역량 강화(4.742) 순으로 나타났다. 요구도 값이 가장 낮은 요소는 작전지역 평가의 변동 요소가 0.192였고, 다음으로 낮은 요소는 정부 관료 요소가 0.435, 국회 요소가 0.4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요인들이 정책변동에서 미래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며, AHP 분석에서 보듯이 현재의 중요도는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지만, 미래 파병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현재의 높은 수준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함을 보여준다.

제 5 장 결 론

이 연구는 해외파병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추출하고,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파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HP분석과 요구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파병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영역별 분석에서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국제협상 영역(0.4253), 행위자 역할(0.4017), 국내협상 영역(0.17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파병 정책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분쟁지역에 개입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사회 기여나 외교역량 및 동맹국과의 결속력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적 요인이 파병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둘째, 영역별로 평가 요소 사이의 분석을 통해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국제협상 영역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국내협상 영역에서는 작전능력 배양, 행위자 역할에서는 정책결정자(대통령)가 영역별 1순위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처 공무원 그룹과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을 비교하면, 국제협력 영역에서는 동맹 강화와 재외국민 보호가 각각 1순위로, 국내협상 영역에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작전능력 배양이 각각 1순위로 상이하였으나, 행위자 역할에서는 양 그룹 모두 정책결정자(대통령)가 1순위로 같이 나타났다.

셋째, 복합가중치의 값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 그룹은 행위자 역할의 정책결정자(0.1856)가 해외파병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다음은 국제협상 영역의 재외국민 보호(0.1266), 동맹 강화(0.1028), 국제사회 기여(0.1007), 외교역량 강화(0.0943)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문가 그룹이 상위순위로 인식한 5개 요인(상위그룹)의 복합가중치 합은 0.61로 역동적인 특성을 가진 요인들로 분석된다. 즉, 정책결정자의 해외파병을 위한 의지와 역할, 파병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피지원국에 대한 인도적 구호 노력, 동맹국들과의 외교관계 등은 정책적 고려 요소가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전문가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위 5개 요인(상위 그룹)에서는 정책결정자(대통령) 1개 요인만 중복되었고, 그룹별 나머지 4개의 결정 요인은 모두 상이하였다. 특히 관련 부처 공무원 그룹에서는 국제협상 영역에 3개 요인과 행위자 역할에 2개 요인이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에서는 행위자 역할에 4개 요인과 국내협상 영역에 1개 요인이 포함되어 전문가가 소속된 그룹의 양상에 따라 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와 평가영역별 평가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얻은 복합가중치의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역동적인 특성을 갖는 해외파병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요인들이 신속하게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 만큼 해외파병 정책 결정에 있어 매우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Top-Down 식으로 진행되는 정책 결정은 되도록 공론화와 다양한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

둘째, AHP 분석 결과와 요구분석의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를 나타낸 작전지역 평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군이 운영하는 국제평화활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역량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및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요구도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외파병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과 전략적 거점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 현재보다 앞으로 더욱 중요시해야 할 최우선순위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기반을 확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UN의 평화 및 안보 분야의 최대·최고위급 정례 회의체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지속 유치하도록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기여 공약의 제시 및 이행을 실천해야 한다.

넷째, AHP 복합가중치 분석에 있어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하여 관련 부처의 공무원

그룹과 유관기관의 전문가 그룹별 인식차가 크기 때문에 양 그룹의 전문가 간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함께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협력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각 군 등 유관기관은 원활하게 협력하고 대응체계를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사회 기여는 AHP 분석에서 상위순위 그룹(4순위)에 포함되며, 요구분석 우선순위에서도 현재보다 미래에 더욱 중시할 요인으로 나타난 유일한 해외파병 정책 결정 요인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관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해외파병에 대한 환경과 범위가 확대되고 다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국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국방부. 『대한민국 해외파병 이야기』. 서울: 국방부, 2020.
-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PKO 약어집』. 서울: 국방부, 2019.
- 권태환 외. 『외교자원 DB 구축을 통한 국방외교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국방외교 협회, 2021
- 박동순.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9.
- 박용성. 『AHP에 의한 의사결정 이론과 실제』. 서울: 교우사, 2017.
- 외교부. 『2022 UN 개황』. 서울: 외교부 국제기구국, 2022.
- 외교부. 『2021 아세안 개황』. 서울: 외교부 아세안국 아세안협력과, 2022.
- 이흥주.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1991-2016)』.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 임윤갑. 『국제분쟁과 평화유지』. 서울: 북코리아, 2021.
- 강찬옥. “UN 평화유지활동과 국제체제의 구조적 성격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2020).
- 김장흠. “해외파병 국방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통합적 모형의 개발 및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제17권, 제2호 (2020).
- 손대선. “중견국 대한민국의 UN 평화유지활동 리더십 발휘 방안; 고위급 직책 배치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2017).
- 윤지원. “탈냉전기 한국군의 파병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世界地域 研究論叢』, 제34집, 제4호 (2016), pp.110-114.
- 윤지원.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 활동과 과제; 다국적군과 청해부대 임무지역 확대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21권, 제2호 (2020).
- 이갑성. “한국의 다국적군 해외파병과 국가 자율성.”,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2015).
- 이신화. “평화외교와 안보공공외교로서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 관한 고찰.” 『OUGHTOPIA(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제34집, 제1호 (2019).
- 이윤주. “한국군 해외파병 결정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의식 분석.” 『인문사회 21』, 제 11권, 제2호 (2019), pp.361-370.
- 정도생. “한국의 해외파병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학위 논문, (2006).
- 정철우. “요구분석을 통한 공원 CPTED 전략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제8호 (2017).
- 지효근. “포괄안보 시대 한국의 해외파병 발전방안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132호 (2021), pp.9-36.

-
- Bob, Woodward, *Bush At War*, Washington: Simon & Schuster, Rockefeller Center, 2002.
- Bruce Russett and John R. Oneal.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rton & Company, 2001.
- Bush, George W. *Decision Points*, New York: Crown Publishers, 2010.
- Jervis, Robertt. *Rational Deterrence: Theory and Evid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Jose Ramos-Horta. *Report of the High-level Independent Panel on Peace Oper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2015.
- Kenneth Katzman. *The United Arab Emirates(UAE): Issues for U.S.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2013.
- Linda J. Nilmes and J. E. Stiglitz. *The Three Trillion Dollar War: The True Cost of the Iraq Conflict*, New York: Norton, 2008
- Levy, Jack S. and Thompson, William R. *Causes of War*, Chichester, England: Malden, Mass: Wiley-Blackwell, 2010.
- Mearsheimer, John and Walt, Stephen. *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Havars University, 2007.
-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2000.
- R. Chuck Mason. *Status of Force Agreement(SOFA): What is It, and How Has It Been Utilized?*,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
- Robert M. Perito. *U.S. Police in Peace and Stability Operations*, USIP Special Reper 191, 2007.
- Steven Metz. *Refining American Strategy in Africa*, U.S. Army War College, 2000.
- William M, Arkin. *Code Names*, Hanover, New York Hampshire: Steerforth Press, 2005.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Determinants of Overseas Dispatch Policy in R.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overseas deployment policy. Various factors affecting deployment policy are identified and then prioritized based on their relative importance.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this study reviews diplomatic policy theories, conducts literature reviews, and examines previous cases of South Korea's overseas deployment decisions. It identifies 13 deployment policy decision factors, classifies them into three areas based on their content characteristics, and designs a measurement model. To measure the relative importance of deployment policy decision factor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 technique that allows the quantification of qualitative judgments, was employed. The analysis was proceeded with needs analysis, comparing the levels of importance between the present and future, thereby strategically selecting factors that will be emphasized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firstly, in terms of the AHP analysis of the evaluation areas for overseas deployment policy decision factors,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were observed in the order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domestic actor, and domestic negotiation area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from complex weighting reveals that experts perceived that the policy decision-maker(the president), protection of overseas nationals, strengthening alliances,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nhancing diplomatic capabilities have a relatively significant impact.

Keywords: Dispatch Policy, PKO, Determinants, AHP, Needs Analysis

투 고 일: 2000년 00월 00일

수 정 일: 2000년 00월 00일

게재확정일: 2000년 00월 00일